

광주 자전거 도로 부족... 일상 속 이용 불편 여전

자전거도로 669km 중 전용로 123km
차도·보행로 모두 방해·위험요소
공영자전거 '타랑개' 정착 안돼
'탄소중립도시' 실현 갈 길 멀어

광주시가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의 교통체제로 전환해 광주를 탄소중립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녹색교통인 자전거 생활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광주에는 인근 하천변 주변에만 자전거 도로가 마련된 탓에 도심에서 출퇴근 등의 용도로 생활화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 자전거 도로는 669.4km로 집계됐다.

다만 이중 자전거 전용 도로는 123.57km로 전체 중 약 18%다. 실상 자전거 이용자들은 보행로와 차도를 빌려 쓰는 신세인 셈이다.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시 우측 차선을 이용해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 운전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 탓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 사고 지대에 놓여있다.



22일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출퇴근용, 장을 보러 가는 용도 등 실생활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 속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전무하며 자전거 겸용 도로는 분절·단절된 경우가 많고 주정차와 시설물로 가로막혀 있어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주민 70대 김모씨는 "은행이나 마트를 갈 때 간혹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차도나 보행로를 이용해 다니고 있다"며 "차도로 가면 운전자들이 위협하

고 뭐라 하고 보행로로 가자니 보행자를 피해 다니느라 힘들다. 어디로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대학생 박모(22)씨는 "학교나 아르바이트를 갈 때 걸어가기엔 거리가 애매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까지 겹쳐서 그나마도 위험한데 겸용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 공공자전거 '타랑개'도 인프라 문

제로 이용률이 크게 높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시는 공공자전거 '타랑개'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난 4월부터 다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운영을 전격 중단한 지 9개월 만이다.

그동안 타랑개는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서구 상무지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 상무지구 일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범위를 넓혀 접근성을 개선

했다.

타랑개 자전거는 총 350대, 주차장은 102개소로 확대 마련됐지만 회원가입 수는 4월 3614건에서 5월 2998건, 6월 2400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또 타랑개 생활형 자전거는 도입된 취지와 달리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광주 전역 일원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민간 자전거 대여 업체와 달리 반납 장소가 한정되고 생활 반경과 먼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 마련이 부족하다"며 "겸용도로로 된 곳들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 분리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본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자전거 이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등록제를 마련해 자전거 등록부터 이용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넘어 일상생활에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도로과와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복구, 식육식당 전수점검 결과 잔반 재사용 '0건'

6월24일부터...경미위반은 19건

광주 복구는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위생 상태 전반을 특별 전수 점검한 결과 잔반을 재사용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유명 식육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지역 내 식육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해 음식물 재사용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6월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주간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1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잔반 재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소비기한 준수 여부 △냉동·냉장 시설 보관 및 관리상태 △개인 위생 관리 상태 적정 여부 등 위생 상태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잔반 재사용 업소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도 미착용, 보관 방법 미이행, 폐기물 뚜껑 미비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19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현장 시정 조치됐고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전수 조사 외에도 관내 4600여개 일반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며 "안전한 먹거리가 주민에게 공급돼 외식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복구지부와 함께 22일 용봉동 전남대 정문 일대에서 음식점 대표자 등 70여명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윤준명 기자

후사경 안 접힌 차량 골라... 상습절도 30대 '덜미'

10여차례... 최소 2500만원 추정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30대 초반 A씨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30대 B씨의 차량에서 현금 1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금은 B씨가 차량에 둔 결혼식 축의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역주적 등을 통해 용의자와 거

주지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3개월 간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10여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금액은 최소 2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준명 기자

'감사관 채용 부당 관여' 시교육청 사무관 구속영장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 고발에 따른 수사 착수 이래 2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당시 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중용에 의해 면접시험 점수 및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A 사무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불거지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 경찰은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감사원 감사와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친 결과 A 사무관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변경을 주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 동구, 쓰레기 없는 마을 위한 '자원순환 생활실험' 성공

불법투기 처리 비용 98% 절감 효과

지난 6월 한 달간 광주 동구의 불법투기 처리 비용이 98%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구가 지난 한 달간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 생활실험(리빙랩)'에 나선 덕분에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으로 보인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산수2동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통합플랫폼 '동구라미 온(ON)'을 활용한 결과 불법투기 처리 비용이 98% 절감됐다.

해당 기간 동안 주민 60여명은 '쓰레기 해결단'과 '거점 배출 이용' 2팀으로 나눠 마을 내 불법투기와 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쓰레기 해결단'은 주민이 쓰레기를 직접 신고·해결하고, '거점 배출팀'은 신규 개발한 인공지능(AI) 종량제 배출함 장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청소차 도착 정보 등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했다.

모든 활동은 자원순환 활동 포인트(현금)로 전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300여건의 불법투기를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해결했으며 비용을 98% 절감하는 획기적인 효과도 거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길거리에 무심코 버려진 휴지 조각조차도 사라져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AI 종량제 배출함 등 이용 시 개인별 배출량을 알 수 있어 쓰레기 감량 활동에 기여하고, 청소차 도착 정보로 쓰레기 수거 시간에 맞춰 배출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은지 기자